



[금융] 베트남에 베풀하는 금융업계 '개시카우' 급부상 04



Economy

코스피 2108.73 (+12.71)	코스닥 691.27 (-1.77)
금리 (연평균) 1.42 (-0.01)	환율 (원/달러) 1168.60 (-2.70) (4일)

반도체 재료·장비 육성 가로막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국내유일 웨이퍼 생산 SK실트론 최태원 회장이 지분 29.4% 보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가능성 세메스 등 내부거래 비판도 발목

반도체 재료·장비 산업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적용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을 비상장사도 대기업 총수 일가 보유 지분 20%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203개가 규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441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에서는 SK실트론이 새로 포함된다. 최태원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 기준 대상이 됐다.

SK실트론은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웨이퍼 생산업체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일종의 판이며, 일본 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 규제 다음 타깃으로 추정될 만큼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적인 재료다. SK실트론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26.8%다. 처음 SK에 편입된 2017년보다 12.2% 포인트나 급증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일단 공정거래법을 보면 거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

용을 받는다.

문제는 '부당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늘면 규제 위반을 의심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해왔다. SI 업계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SK가 SK실트론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으면서도 아직 그렇다할 '작품'을 내놓지 못한 데에는,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반도체 재료·장비 계열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SK머티리얼즈, 삼성전자세메스가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반도체 재료·장비 업체다.

특히 세메스는 내부거래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 10위에 오르며 발전해왔지만, 최근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으면서 압박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실트론과 세메스는 최근 반도체 산업 초호황으로 내부거래를 늘렸을뿐"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눈치 때문에 시너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부회장. /연합뉴스

“국익 위해서 함께 소통·협력” 靑·정부, 삼성과 대응책 논의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정부·삼성전자가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4일을 기준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쓰이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로,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한일 간 정서적 골이 상당히 깊단 얘기가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 단행되자 청와대와 정부, 삼성전자 등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김 제2차장이 직접 김 부회장을 만난 점이다. 김 제2차장은 국제통상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인식을 정부-시장과 공유함은 물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의 이유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전화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손정의 회장 만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왼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혈당 낮추는 쌀... 건강 기능성 식품 주목

푸드테크 시리즈

(2) 식품의 혁신

식품업계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음식은 이제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에서 발전해 환자들을 위한 식단 등 환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했다.

또한 건강이 중요 시 되면서 업계는 건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당을 줄이거나 대체감미료 등을 사용하거나, 튀기지 않은 면을 사용한 제품, 다이어트를 위

한 저칼로리식이 그것이다.

◆환자를 위한 환자식

국내 당뇨 환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식품업계는 혈당 조절을 돕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밀가루 대신 곤약으로 만든 면에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인 알루로스, 스타비아를 사용한 도시락을 만드는 식이다. 혈당을 낮추주는 물질이 들어간 쌀도 나왔다. 아울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암 등 질병을 앓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맛과 영양을 갖춘 '환자 맞춤'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3월 혈당을 낮

추는 기능이 있는 '혈당강하쌀'을 선보였다. 혈당강하쌀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쌀보다 3배 비싼 가격에도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2달 만에 650포대 이상 판매됐다. 이 제품은 인슐린과 유사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물질인 '바나듐'이 들어있다.

식이요법 스타트업 '닥터키친'은 당뇨·암 등으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식단을 제공한다. 싱겁고 맛있는 식사에 지친 환자를 위해 예전에 먹던 식사를 건강하게 재현했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u7854@